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보도시점: 2025. 6. 2.(월) 10:00 배포: 2025. 6. 2.(월) 8:30

## “행정심판,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 국민권익위, 오늘(6월 2일) 90개의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정식 개통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청구진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까지...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였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었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심판통합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 해	(044-200-7473)
		담당자	사무관	안진철	(044-200-7516)

